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개혁과 NGO의 역할

홍종학

NGO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만큼 영향이 큰 반면 학계의 연구활동은 미미하다. 자연히 NGO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재벌개혁에 있어서 정부는 NGO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NGO가 축적해 온 지적 자산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영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숙제가 남는다. NGO가 얼마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할 것인가와 정부와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I. 서 론

한국의 재벌개혁에 있어서 NGO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때로는 현장에서의 운동을 통해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제는 과거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공과를 논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되었고, 그러한 작업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필자는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461-701.

이 논문은 2001년 5월 18일 한국 NGO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김균, 황인학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편의상 연구의 범위를 좁혀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서만 논의를 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NGO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감한 단순화를 시도한다. 편의상 한국의 재벌과 관련된 연구자들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4개 그룹은 ① 한국경제연구원 및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 ②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연구자들과 일반 학자들, ③ 경실련의 학자들, ④ 참여연대의 학자들로 구분한다.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경제학 분야에서 4개 그룹으로의 구분은 오직 논의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필자 개인의 자의적인 구분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 4개 그룹의 견해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묶는다. 재벌정책에 있어 재벌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환경개선론에 위 ①과 ② 그룹의 견해를 묶고, 재벌 자체에 대해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재벌개혁론하에 ③과 ④ 그룹의 견해를 묶는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을 비교해 본다.

이러한 분류하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각 그룹의 정책대안과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과감한 단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한다.

II. 4개 재벌연구 그룹

편의상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을 구분하기로 한다. 특히 준비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본 논문에서 비교하는 내용은 인용된 문헌에 한정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필자가 알지 못하는 그 외의 문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 그룹에 속한 연구자일지라도 부분별로는 다른 그룹의 연구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분류는 오직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잡기 위한 편의상의 분류일 뿐이고,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① 제1그룹: 재벌 옹호자 - 한국경제연구원 및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

제1그룹은 철저하게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 재벌에 대한 모든 규제를 배격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재벌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벌 때문이 아니라 금융·노동·상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재벌에 대한 규제노력을 폐기하고 대신 전반적인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이나 공기업을 재벌에게 매각하여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각 기업 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포함된다. 경제신문사의 논조도 이들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문헌을 이용하여 이들의 주장을 분석한다. 편의상 한경연 그룹으로 부르기로 한다.

매일경제 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편,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이재우·황인학·박승록·박성준·이병기·전인우·김은자,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8.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

② 제2그룹: 사실 확인자 -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원 및 대학의 산업조직 연구자들

이 그룹은 재벌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벌문제에 관한 많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재벌과 관련된 논의를 생산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항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여라는 문제가 있다. 외

환위기 이전보다는 이후에 재벌의 폐해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그룹은 재벌문제에 대해 실증분석의 결과에 입각한 합리적 대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그 대책에 있어서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견해에 가깝다. 편의상 KDI그룹으로 부르기로 한다.

김용열·조창현·조명현,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총서, 을유문화사, 2000.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 2000.

정운찬,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도서출판 나무와 숲, 1998.

한국산업조직학회 편,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1996.

③ 제3그룹 : 대안 제시자 - 경실련의 연구자들

경실련의 연구자들은 재벌규제정책이 시행되는 초기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민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재벌규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실련의 연구자들은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를 재벌개혁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수 중심의 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소유의 분산을 적극 옹호한다. 편의상 경실련그룹으로 부르기로 한다.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1999.

경실련 정책협의회 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2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8.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 1999.

홍중학,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 재벌편』, 도서출판 해남, 1998.

_____, “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 『응용경제』, 제2권 제2호, 2000.

_____, 『한국은 망한다』, (주)이슈투데이, 2001.

④ 제4그룹: 개혁 행동가 - 참여연대의 연구자들

재벌의 특징으로 세습독재경영과 선단경영을 들 수 있는데, 경실련 그룹이 선단경영을 독립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해 이들은 세습독재경영의 폐해를 중시한다.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실천적 운동에 나서서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편의상 참여연대그룹으로 부르기로 한다.

김대환·김균 편, 『한국재벌개혁론』,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나남출판, 1999.

김기원,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9a.

_____,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b.

그 외 많은 학자와 운동가들이 재벌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의 기여를 다 포함하지 못한 것은 필자의 태만 때문임을 밝힌다.

Ⅲ. 환경개선론과 재벌개혁론¹⁾

앞의 4개 그룹의 견해를 다시 단순화하면 재벌정책에 있어 재벌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환경개선론에 위 환경연과 KDI 그룹의 견해를 묶고, 재벌 자체에 대해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재벌개혁론하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의 견해를 함께 둘 수 있다.

환경개선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재벌문제는 시장이 채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래된 것으로 재벌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을 개선하면 재벌의 기형적 행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재벌에 책임이 없다는 환경연 그룹의 주장에 외부환경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KDI 그룹의 주장이 가세하고 있다.

재벌개혁론은 재벌의 기형적 행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극적인 환경개선론으로는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경실련 그룹의 재벌행태 규제를 주축으로 하여 참여연대 그룹의 경우 총수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주장으로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을 소개한다.

1. 환경개선론과 진화가설

최근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최승희 [108]는 진화가설을 제시하였다. 진화가설은 현재 재벌이 보이고 있는 각종 행태는 과거 한국의 경제제도에 기업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형적 경제제도하에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

1) 이 부분은 홍종학 [126]을 많이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인 경영에 따른 거래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족벌경영을 선택하게 되었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기업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각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²⁾ 특히 은행이나 언론기업에 진출하려는 집착을 보이는 재벌의 행태 역시 이러한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다각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정부의 산업정책도 들고 있는데,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반면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선택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면 모든 재벌이 진입을 시도하는 다각화 행태가 보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재벌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채무보증의 만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병기 [76], 공병호 [9]는 채무보증은 은행이 이용해 온 대출관행이며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금융시장의 여건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재벌의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진화가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화가설의 또 다른 형태는 유승민 [6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벌은 금융시장, 노동시장, 기술시장, 경영자시장 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 경제의 문제를 내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한계계열사에 대한 내부보조로 인해 자원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행위 역시 국민경제에 비용으로 작용한다.

진화가설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재벌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즉, 원인이 재산권이 확보되지 못한 제도나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므로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킨다면 재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비정상적인 행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규억 [72]도 '자본시장, 회사법제, 여타 산업정책 등 재벌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들 제도가 경제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속에서 재벌구조를 변형시켜 나가

2) 물론 범위의 경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는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재벌규제의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화가설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이는 재벌의 행태에 대한 원인부분과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부분이다. 정책은 원인규명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원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충분조건도 충족되는 것인가? 정태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옳겠지만, 진화가설이 상정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2. 재벌개혁론과 암세포가설

경제발전단계에서 시장이 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벌이라는 기형적 기업조직이 생성되었으므로,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여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진화가설의 재벌대책이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명제는 항상 참이 아니다. 진화가설이 기초하고 있는 생물학적 현상에서조차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생물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런 현상으로 암세포를 착안하여 이를 재벌문제에 대입해 보았다.³⁾ 한국의 재벌은 부실화되면 전 계열사가 동시에 무너지는 大馬沒死現狀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벌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大馬不死政策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재벌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벌로의 자금편중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3) 진화가설은 모든 책임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맹점이 있다. 즉, 재벌이 정경유착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온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진화가설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논리적 비판으로 김진방 [35]이 있다.

다시 재벌의 외형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처럼 과도한 부채를 통해 커진 외형과 대마불사정책으로 인해 재벌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재벌 내부에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 암세포가설의 내용이다.⁴⁾

대마불사정책과 이에 따른 일반의 믿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면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기능을 붕괴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재벌이 시장기능을 붕괴시키는 것은 부실해졌을 때도 퇴출되지 않는 왕성한 생명력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암세포와 대비될 수 있다. 암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달리, 단지 왕성한 자기복제능력을 지닌 체세포일 뿐인데 바로 이 과도한 생명력이 인체의 조화를 해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간단히 암세포가설이 상정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과 인체에서의 암세포 관계를 비유적으로 대비해 본다.

● 먼저 암세포의 특징은 놀라운 생명력이다.⁵⁾ 일반 세포는 50~100회 정도 분열한 후 자기 기능을 다하면 소멸하여 인체의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반면, 암세포는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복제에 의해 결국은 영양분을 독점하여 다른 세포를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체를 죽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재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거대 재벌이 형성되지 않은 대만에서는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신설되고 잘못 경영되면 퇴출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현상이 관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벌의 사업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거나 퇴출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재벌은 과잉투자를 반복하여 총자산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암이 발견될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최초의 암세포 생성으로부터 약 5년이 걸려 30회 정도의 분열을 통해 약 10억 개 정도가 될 경우인데, 여기서 약 10회 정도의 분열을 더 해 암세포수가 1조 개 정도 되면 치명적이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짧다고 한다. 즉,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4) 암세포 가설의 자세한 내용은 홍종학 [126]을 참조하십시오.

5) 암에 관한 이론은 시사저널, '암세포 죽이기' 1998. 5. 21에서 참조하였다.

최근 보여 준 재벌의 성장속도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방편으로 이른바 친족그룹을 독립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적 규제 외의 현상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더욱 큰 세력으로 커 가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 암세포는 환경의 악화에 의해 생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암세포가설은 진화가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암세포가 소멸될 가능성은 작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기형적인 암세포이지만,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소멸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육식을 많이 해서 체력은 강화되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일단 암이 발생하면 식생활을 바꾼다고 암이 치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해 왔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 재벌은 생성되었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재벌의 위치는 공고화되었다.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시장의 규모에 비해 비대해진 재벌이 그 행태를 변화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서 지적한 대로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암은 초기에는 외과적 수술에 의해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미 타 부위에 전이된 상태에서는 외과적 수술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한 암 조직은 혈관생성 억제물질을 분비해 근처에 있는 다른 암조직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성장한 암 조직을 외과적 수술에 의해 제거하면 성장을 억제 당했던 잠복중인 암세포가 다시 성장하게 된다.

한국에서 재벌문제가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로 판단된다. 재벌의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 이른바 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어 강제적으로 기업이 통폐합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국제그룹을 해체하는 등 물리적으로 재벌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재벌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하

나의 재벌을 물리적으로 해체한다고 재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재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재벌기업을 또 다른 재벌기업이 인수하여 부실기업을 처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의 거대화는 지속되어 왔다.

- 암은 인체가 위약하면 세포분열이 저하되어 성장이 둔해지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급격하게 증식해 인체를 죽게 한다. 노인의 경우에는 암이 걸려도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암세포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안정정책을 취하게 되면 재벌의 성장은 억제되지만, 경기활성화 정책을 취하는 경우 급성장을 이룬다. 특히 과도한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재벌의 입장에서 저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의미하는 안정정책은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벌은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유도하는 확장금융정책을 주장하고 정책당국에 로비를 펴 왔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로비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확장정책에 의해 재벌의 성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정부가 부채비율 감축등을 강요해서 일시적으로 재벌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한 재벌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3.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의 비교

진화가설이 과거 재벌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암세포가설은 현재의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재벌이 기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진화가설은 파악하고 있는 반면, 암세포가설은 이미 기형화된 재벌로 인해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한국 재벌처럼 계열사가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의 편중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 역시 대규모 공기업이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를 하고 있음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철저해지는 등 재벌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암세포가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우량 계열사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간의 연결이 공고해진다면 이 역시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채무보증이 허용된다면 금융기관은 대금회수수단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므로 사용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앞서 밝힌 대로 재벌이 높은 수익을 보일 때는 주주 및 경영자와 노동자, 심지어 금융기관도 큰 이익을 보게 되지만, 재벌이 부실화되었을 때의 손실은 공적 자금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설이 제시하는 정책의 특징이 된다.

IV.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재벌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급히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1997년 말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1월에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신규보증은 전면금지하고 기존의 보증에 대해서는 해소시기를 앞당겼다. 1998년 3월에는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5대 개혁과제를 발표한다.⁶⁾

6) 재정경제부 [95].

이처럼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이 급속하게 추진된 것은 그 이전과는 크게 대비된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이라는 주제하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 재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정책을 제시한 논문은 드물었다. 오히려 그 동안의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한경연과 KDI그룹에 속한 학자들의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정책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그룹의 주장,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참여연대그룹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의 정책에 대해 4개 그룹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한경연과 KDI그룹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부작용을 많이 빚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을 놓고 각 그룹의 주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채무보증금지

채무보증의 금지는 외환위기 이후 즉시 시행된 재벌규제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아마 정책당국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전 한경연 그룹은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병기 [76], 공병호 [9] 등을 통해 채무보증은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하며 효과적이지도 못할 것으로 주장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인 채무보증의 금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거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KDI그룹에서도 유승민 [63]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강력한 제재를 주장해 왔고 밝히고 있으나, 신광식 [55]이나 이규억 [73]은 채무보증 금지는 재벌의 자

금조달방법에 대한 부분적이고 유량적인 제약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그룹은 지속적으로 채무보증금지를 주장해 왔으며, 김주영 [31]은 현재 예외조항으로 취급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과 관련한 채무보증등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경실련 그룹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보증의 금지는 필수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과거의 폐해가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채무보증의 금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조만간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출자총액제한

재벌 계열사간 출자총액에 대한 규제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폐지되었다가, 출자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자 다시 부활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한 총액 이상의 출자분을 해소하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재벌 쪽에서 재차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현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는 일종의 벤처캐피탈 기능을 하고 있으며,⁷⁾ 따라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출자규제는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배분과 이전을 어렵게 하며', 인수합병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해 재벌을 역차별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⁸⁾ 따라서 KDI그룹은 총수의 경영권 남용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선단경영에 의한 경쟁 제한의 폐해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실련 그룹에서는 채무보증금지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계열사간 출자가 선단경영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 하며, 이의영 [83]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타기업 출자를 금지해야

7) 그러나 유승민 [63]은 1998년의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것은 성급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지배권 세습의 근거가 되는 계열사지분율을 규제하는 유일한 장치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8) 신광식 [55].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출자총액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정책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계열사간 출자가 총수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대그룹에서도 출자총액을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간접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간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간접상호출자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하거나 적어도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부당내부거래 규제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그 이전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조항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많은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부거래를 부당한 지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이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원성 거래를 총량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KDI그룹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성 거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환영하고 있다.

5. 부채비율 규제정책

재벌은 그 소유구조로 인해 과도하게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내로 규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중요법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채액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당히 무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채비율규제를 달성했음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의 제거에 관심을 두었다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채비율 관리정책은 그 동안 경실련 그룹이 계속 제기해 온 과도한 부채비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6. 지배구조의 개선

참여연대 그룹이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온 사업분야가 바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분야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으로도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주창해 왔다. 아울러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는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형편이어서 집중투표제보다는 집단소송제가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를 시행해 왔다.⁹⁾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유승민 [63]은 이러한 지배구조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이러한 힘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를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지금까지 재벌과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문제가 충분히 인식된 이후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에서는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9) 자세한 내용은 유승민 [63]을 참조하시오.

위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하여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시 재벌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한경연과 KDI그룹이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재벌개혁에 있어 NGO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학계의 연구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NGO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NGO의 주장을 대폭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 NGO가 축적해 온 지적 자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많은 제안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NGO의 속성상 끊임없이 정부와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때로는 제안된 대책이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다. NGO가 정책 결정과정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논의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NGO의 역할 중에서 시민행동을 통한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벌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서슴지 않는 등의 운동을 통해 재벌개혁에 큰 기여를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서 밝힌 대로 이제는 NGO의 모든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향후 누군가 더 나은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강명현, 『경제력 집중과 한국경제』, 매경신서 32, 1991.
2. _____,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3. 강신일,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1.
4. 강철규, “재벌의 금리차 지대와 소유구조”;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포스코경영연구소, 1995, pp. 140~158.
5. _____, 『재벌개혁의 경제학: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1999.
6. _____ · 최정표 · 장지상,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7. 경실련 정책협의회 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2000.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8.
9. 공병호, 『재벌: 비난받아야 하는가』, 예명사, 1992.
10. _____, 『대재벌의 효율성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3.
11. _____,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한국의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4.
12. _____,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1995a, pp. 307~330.
13. _____,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도서출판 창해, 1995b.
14. 구석모, “한국의 재벌성장과 금융체제”,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15.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1995.
16. 김경수 · 김우택 · 장대홍, 『기업가치, 소유경영구조 및 정부규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통신학술연구과제, 1994.
17. 김경수 · 김우택 · 박상수 · 장대홍, “상호주식보유와 기업재무정책”,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1998, pp. 221~258.
18. 김기원,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9a.

19. _____,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b.
20. 김대환·김균 편, 『한국재벌개혁론』,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나남출판, 1999.
21.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1998, pp. 391~422.
2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6.
23. 김세진·정한영,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1999.
24. 김용열·조창현·조명현,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총서, 울유문화사, 2000.
25. 김우택·장대홍·김경수, “기업가치와 대주주지분율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연구』, 한국재무학회, 1993.
26. 김인중,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형성, 행동 및 성과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발표논문, 1992.
27. 김정호, 『한국법의 경제학 I』, 한국경제연구원, 1997.
28. 김재홍, 『한국의 진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4a.
29. _____, “진입규제의 비효율성”, 『산업조직』, 한국산업조직학회, 1994b.
30. _____, “재벌과 경쟁정책”,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31. 김주영, “김대중 정부 초기의 공정거래정책과 재벌개혁”; 김대환·김균 편, 『한국재벌개혁론』, 1999, pp. 263~293.
32. 김주현,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한국재무학회, 1992.
33. _____·이원흠·진태홍,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소유집중과 기업통합체제”; 정광선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1996, pp. 179~217.
34. 김준경, 『재벌의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한국개발연구원, 1999.
35. 김진방, “신자유주의자의 재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대환·김균 편, 『한국재벌개혁론』, 1999, pp. 329~367.

36.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37. 매일경제 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편,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38. 문종진, “기업지배구조논의의 대두와 대응방안”, 『경제분석』, 1(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5, pp. 37~68.
39. 박경서,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97-05, 1997.
40. _____, “은행의 재벌소유 허용할 것인가?”, 금융개혁 대토론회 발표논문, 1998.
41. 박상수·진태홍, “대기업집단의 경영효율성”; 정광선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1996, pp. 219~244.
42. 박상용, “한국기업의 투자행태”, 한국증권거래소 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 자료, 1996.
43. 변형윤, “재벌의 윤리와 경제발전”, 『신동아』, 제136호, 1975.
44. 사공일,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 봄호, 1980.
45. _____·존스,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1981.
46. 서동원, “재벌과 공정거래제도”,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47. 선우석호, 『한국기업의 경쟁전략과 기업구조 개선』, 한국경제연구원, 1994.
48. _____, “기업집단의 구조개편과 전망”; 정광선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1996.
49. 소병희, “재벌위주의 산업정책과 지대추구의 효율성”, 『한국정책학회보』 3, 1994, pp. 7~31.
50. _____, “한국기업의 소유집중과 경제효율성”;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포스코경영연구소, 1995.
51. _____,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재벌의 역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공과평가”,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52. 소일섭,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53. 송병락,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재벌의 문제와 대응방안”; 조동성 편,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pp. 443~464.
54. 송복,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재벌의 문제와 대응방안”; 조동성 편, 『한국재

- 별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pp. 465~492.
55.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56. 양원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1992.
 57. 엄영석, 『한국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1996.
 58. 우영수, 『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59. 유승민,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 14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2a.
 60. _____, 『세계화와 기업집단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2b.
 61. _____, 『나누면서 커간다』, 미래미디어, 1996a.
 62. _____, “재벌의 공과: 재벌논쟁에 대한 비판”,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b.
 63. _____,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 2000.
 64. _____ · 이인찬, “한국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0.
 65. 유인학, 『한국 재벌의 해부』, 풀빛, 1991.
 66. _____,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력업종제도”, 민주당 제80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1993.
 67. 유정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의 자원배분효과”, 『한국경제와 시장원리』, 한림대 한림경제연구소, 1990.
 68. _____,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13(1), 1991, pp. 65~114.
 69. 유한성 · 국중호 공역,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화평사, 1991.
 70. 이규억,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한국개발연구원, 1977.
 71. _____, “경제력 집중: 기본시각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2권, 1990.
 72. _____, “21세기를 향한 재벌의 진로와 정부의 역할”,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73. _____, “구조전환기 기업집단정책의 비판적 고찰”, 『산업조직연구』, 제8집 제1호, 2000.
 74. _____ · 이성순,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85.
 75. _____ · 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76. 이병기,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도 개선방안”; 이재우 엮음 『개방경제와 경제력 집중』, 1998, pp. 185~224.
77. 이언오, “정부의 기업집단정책과 지배구조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78.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a.
79. _____,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협의회 자료, 1996b.
80. 이원흠, “차입경영 억제정책의 재무적 효과”, 『금융연구』, 7(2), 1993.
81. _____, “상호지급보증규제의 재무적 영향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제16집, 1994.
82. _____, “기업통합체제에 관한 실증연구”; 정광선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1996, pp. 291~306.
83. 이의영,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의 새 패러다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 1998, pp. 81~116.
84. 이재우·황인학·박승록·박성준·이병기·전인우·김은자,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8.
85. 이재형, “우리나라 재벌의 현황과 특징”,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86. _____·유승민, “대사업체와 재벌사업체의 성장과 생산성”,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87. 이재희,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개편방안”, 한국사회경제학회 13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6.
88. 이종화·이영수, “한국 기업의 부채구조 특징: 1981~1996년 기간의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비교”, 한국계량경제학회 1998년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1998.
89. 이철송, 『경제력 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한국경제연구원, 1995.
90. 임웅기, 『기업소유구조와 자본시장 발전』,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1988.
91. _____, “세계 각국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제2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1995.
92. 장지상, “한국재벌의 소유집중과 다각화”, 『한국의 산업발전과 재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움 시리즈 II, 1995, pp. 87~115.

93. _____, “한국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소재와 개선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1996.
94. 장현준, 「금융기관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새로운 관계정립」, 한국금융연구원, 1994.
95. 재정경제부,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1998.
96. 전인우, 「한국 기업집단의 다각화 결정요인」, 한국경제연구원, 1996.
97. _____ · 공병호,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1995.
98.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대한상공회의소, 1987.
99. 정균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100. 정광선, 「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1994.
101. _____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1996.
102. 정병휴 · 양영식, 「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3. 정운찬,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도서출판 나무와 숲, 1998.
104.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105. _____,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106. 조용범 · 정윤희, 「한국 독점자본과 재벌」, 풀빛, 1984.
107. 조우현, “경제력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15권, 1992.
108. 최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109. 주종환, 「재벌경제론」, 정음문화사, 1985.
110. 진태홍, “일본기업집단의 상호주식보유와 경제적 의미”, 『재무관리연구』, 제10권.
111. 최두열, “한국 통화위기의 내부적 원인”, 『국제무역연구』, 제4권 제1호, 1998, pp. 275~300.
112. 최승노, 「1995년 30대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5.
113. _____, 「1996년 30대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6.
114. _____, 「1997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1997.
115. _____, 「1998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1998.
116. _____, 「1999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1999.

117. _____, 『2000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2000.
118. 최정표, 『선진화를 위한 재벌의 선택』, 고원, 1996.
119. _____,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 1999.
120.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
121. 한국산업조직학회 편,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1996.
122. 한진희, 『외환위기 이전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9.
123. 홍덕률·공계욱, 『재벌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체제의 개혁방향』, 한국산업사회학회, 1996.
124. 홍영기, “일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간 관계”; 강신준 외, 『일본자본주의 분석』, 풀빛, 1996.
125. 홍종학,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 재벌편』, 도서출판 해남, 1998.
126. _____, “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 『응용경제』, 제2권 제2호, 2000.
127. _____, 『한국은 망한다』, (주)이슈투데이, 2001.
128. 홍현표, 『한국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발표논문, 1992.
129. _____, “한국재벌의 소유집중”, 『경제학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3, pp. 239~263.
130. 황인학, 『경제력 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1997.
131. _____,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 이재우 외,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8.